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경협 과제*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I. 개 요
- II. 남북경협 30년 평가
- III. 新남북경협을 위한 제언
- IV. 시사점

〈요 약〉

최근 남북간 대화 재개를 계기로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988년 7.7 선언을 계기로 북방정책이 추진되고 남북경협이 시작되었으며, '88 서울 하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바 있다. 30년이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남북경협 재개 등 新남북경협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남북경협 30년을 맞아, 남북경협 추이를 살펴보고 新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98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0년이 된 남북경협은 정치·군사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부침을 겪어왔으며, 시기별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도입기(1988~1997년)에서는 남북교역을 민족 내부 거래로 간주한다는 1988년 7.7선언에 따라 남북경협이 시작되었다. 둘째, 성장기(1998~2007년)의 남북경협은 1998년 2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와 금강산 관광 개시, 2007년 10.4

* 본고는 현대경제연구원, “新남북경협의 과제와 시사점 - 남북경협 30년 평가”, 『현안과 과제』 18-01 2018. 01. 10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성장하였다. 셋째, 정체기(2008년~현재)에서는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남북경협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2016년 북한 핵실험에 따른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남북 간 경협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남북경협 30년을 맞이하는 현재,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5가지 고려사항(AGAIN)을 염두에 두고 점진적·단계적 남북관계 정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 국면에서 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이를 활용한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결단(Adequate political decision)이 필요하다. 최고 정책결정자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협의 당위성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북핵 문제 해결 진전 시 「남북기본협정」체결 등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Genuine changes)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남북한 모두 한반도 개발을 위해 'H 경제 벨트' 조성 등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경협 부문의 합의(Agreement) 도출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북핵 해결 진전 시 남북 경제협력 재개를 위해 대북제재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s)를 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National consensus) 형성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1. 개요

최근 남북 간 대화 재개를 계기로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다. 1988년 7.7 선언을 계기로 북방정책이 추진되고 남북경협이 시작되었으며, '88 서울 하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바 있다. 30년이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남북경협 재개 등 新남북경협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특사 등 22명의 북한 고위급대표단 방남(2.9~11)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친서를 전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남북경협 30년을 맞아, 남북경협 추이를 살펴보고 新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 1〉 최근 남북관계 일지

일 시	주요 내용
17. 7. 6	- 新베를린구상(독일 코르버재단 연설) :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 이끌 ‘5대 기조, 4대 제안’ 제시
7.19	-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 재확인(국정운영 5개년 계획) ※ 동해권, 서해권 등 권역별 남북 협력 벨트를 마련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
9. 3	- 北, 6차 핵실험 단행
9. 7	- 新북방정책(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 나인 브릿지(9-Bridge) 전략 제시 ※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 9개의 다리(9-Bridge)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워나가자는 것
18. 1. 1	- 北,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시사
1. 2	- 정부,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개최 제의
1. 9	-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 합의 도출 ※ 北 대표단 평창올림픽 파견, 군사당국회담 개최, 우리민족이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남북 고위급 및 각 분야 회담 개최)
2. 9~11	- 北 고위급 대표단 방남 ※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 문 대통령 접견 및 오찬, 남북 단일팀 경기 관전 및 北 예술단 공연 관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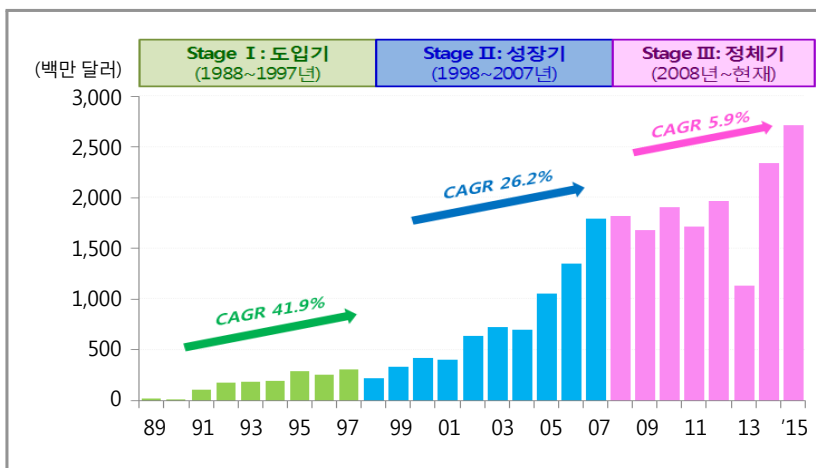
자료 : 필자 작성.

II. 남북경협 30년 평가

1. 남북경협 30년

남북경협은 지난 30년 동안 정치·군사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부침을 거듭하였다. 1988년 시작된 남북경협은 도입기(1988~1997년), 성장기(1998~2007년), 정체기(2008년~현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완전히 중단되었다.

〈그림 1〉 남북교역액 추이



자료: 통일부 자료로 필자 작성.

2. 각 단계별 주요내용

가. Stage I (1988~1997년): 도입기

남북경협은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 발표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7.7 선언은 남북 주민의 상호 교류를 허용하고, 남북 간 교역을 민족 내부의 교역으로 간주하는 한편, 국제 사회에서 상호 협조 등을 강조하였다. 동년 10월 ‘對북 물자교류에 관한 기본지침’¹⁾ 발표를 통해 남북교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1년에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가 체결되었다. 그러나 1993년 북핵 위기 및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등으로 남북교역은 위축되었다. 그러나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 이후 동년 11월 ‘1차 남북경협 활성화조치’²⁾가 발표되면서 위탁가공이 확대되었으며, 對북 경수로지원 사업 진전 등으로 교역액이 증가하였다. 한편, 1996년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³⁾ 및 1997년 외환 위기로 남북교역은 다시 위축되었다.

1) ① 민간상사의 북한물자 교역 허용, ② 민간상사의 북한물자 증개 허용, ③ 북한물자의 원산지 표시 및 상표 부착 허용, ④ 직·간접 교역물자에 대한 관세 미 부과, ⑤ 남북 경제인 상호 접촉 및 방문 허용, ⑥ 북한선적의 상용선박 입항 허용, ⑦ 남북한 경제교류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2) 기업 총수를 제외한 기업인 방북 등 남북 경제인사의 상호방문 허용, 1회 100만 달러 이하의 위탁가공용 시설재 반출 및 기술자 방북 허용, 500만 달러 이하의 시범적인 경제협력사업 실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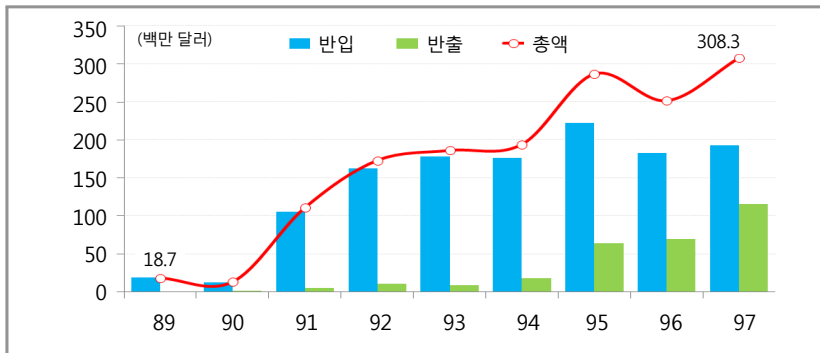
3) 1996년 9월 18일 강원도 강릉시 해안가에 좌초된 선박이 북한의 소형 잠수함으로 확인됨. 군인·경찰·예비군은 49일 동안 소탕작전에 돌입하여 무장간첩 1명을 생포하고 13명을 사살.

〈표 2〉 7.7 선언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과 정	-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 발표 (노태우 대통령, 1988. 7. 7)
주 요 내 용	① 남북 동포 간 상호 교류 추진 ② 이산가족의 생사·주소 확인, 서신 왕래, 상호 방문 적극 지원 ③ 남북 교역을 민족 내부 교역으로 간주 ④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추구 ⑤ 국제무대에서 민족 공동이익을 위해 협력 ⑥ 북한의 대미·대일 관계 개선 협조 등

자료: 통일부 자료로 필자 작성.

〈그림 2〉 도입기(1989~1997년)의 교역액 추이



자료: 통일부 자료로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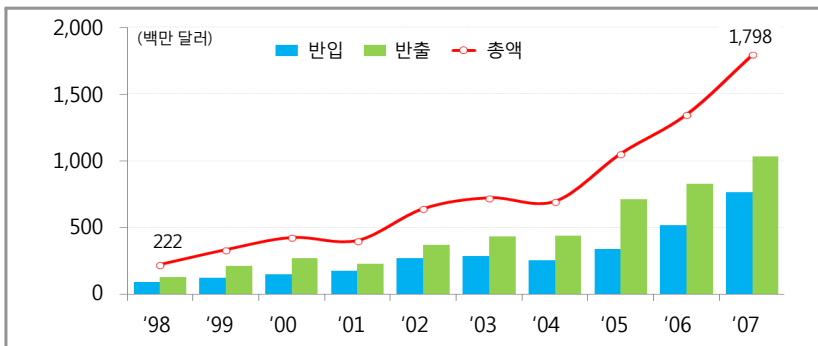
나. Stage II(1998~2007년): 성장기

1998년 4월 ‘2차 경협활성화 조치’⁴⁾에 따른 기업인의 수시 방북 확대로 동년 11월 금강산 관광이 개시되면서 남북경협은 본격화되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로 대규모 대북 지원과 동년 12월 ‘4대경협

4)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 방북 전면 허용, 대북 투자규모 제한 완전 폐지, 대북 투자제한업종의 ‘네거티브 리스트’화, 생산 설비 대북반출 제한 폐지 등.

합의서⁵⁾ 서명 등으로 경협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특히, 2003년 개성공단 착공은 남북경협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2004년 12월 개성공단 가동 및 첫 제품 생산으로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되었다. 2005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2007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발효 등 남북경협의 제도화도 진전되었다.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경협의 확대·발전을 합의했으며, 동년 12월 개성관광도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등 핵 문제가 본격적인 경협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그림 3〉 성장기(1998~2007년)의 교역액 추이



자료: 통일부 자료로 필자 작성.

다. Stage III(2008년~현재): 정체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7. 11)이후 금강산 및 개성관광이 중단되면서 남북경협은 정체기를 맞게 된다. 2010년 천안함 사건(3. 26)으로

5) 이종과세방지합의서, 청산결제합의서, 상사분쟁합의서, 투자보장합의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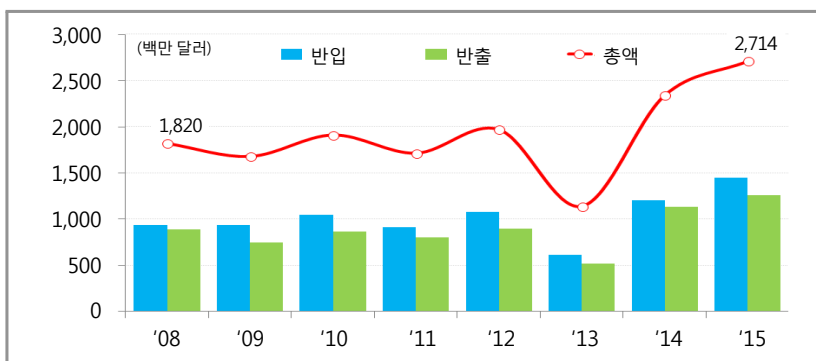
한국의 對북 경제제재인 '5. 24 조치'가 발표되었으며, 2013년 4월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 및 동년 8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체결로 9월 재가동되었다. 그러나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되었다.

〈표 3〉 5.24 조치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과 정	– 천안함 사건(2010. 3. 26)이 계기
주 요 내 용	① 북한선박의 운항과 입항 금지 ② 남북 간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입 금지 ③ 북한 지역에 대한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개성·금강산 제외) ④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개성공단은 지속하되 체류인원은 축소 운영 ⑤ 대북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영유아 등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은 유지

자료: 통일부 자료로 필자 작성.

〈그림 4〉 정체기(2008년~현재)의 교역액 추이



Ⅲ. 新남북경협을 위한 제언⁶⁾

북한의 핵실험이 지속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군사 도발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남북경협은 물론, 남북관계는 현재 사실상 단절된 상황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모색하는 한편, 나아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북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 시점이 남북한 모두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남북경협의 점진적·단계적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며, 그 첫 단추는 기존에 추진된 바 있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의 재개라고 할 수 있다. 금강산관광을 포함한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① 고도의 정책적 결단(Adequate political decision), ②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Genuine changes), ③ 남북 간 합의(Agreement), ④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s), ⑤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국민적 합의(National consensus) 등 5가지 고려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6) 본 장은 이해정·이용화, “남북경제협력의 정상화 과제-AGAIN, 남북경협”, 『현안과 과제』 17-27호(2017)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임.

7)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를 타파하고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평화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신북방정책을 제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형성해 동북아 평화와 협력적 환경을 조성. 이를 위해 동북아 주요국 간 다자협력 전략의 제도화를 도모, 아세안과 인도와의 관계 강화, 유라시아 협력강화를 통해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북방 지역을 ‘변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병행 추진. 나진·하산 물류사업과 철도·전력망 등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기반 마련, 유라시아경제연합(EAEU·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벨라루스, 2014년 창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참여 등이 주요 내용임.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해정·이용화,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 『VIP 리포트』 17-28호(2017), 참고.

〈표 4〉 AGAIN, 남북경협

구 분	주요 내용
고도의 정책적 결단 (Adequate political deci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남북관계는 사실상 중단 - 시사점 : 경협 필요성 및 재개에 대한 판단 필요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 (Genuine chan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 北 군사 도발 지속과 南 정책 추진 일관성 결여 - 시사점 : 남북관계 제도화 모색
남북 간 합의 (Agre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 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간 합의 필요 - 시사점 : 남북한 경제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안 도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확대·강화 - 시사점 :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를 구할 필요
국민적 합의 (National consens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 경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부족 - 시사점 : 통일 공감대 확대를 위한 노력

자료 : 필자 작성.

1. Adequate political decision : 정책적 결단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경협을 재개할지 여부는 고도의 정책적 결정 사항이다. 북한의 지속된 도발로 남북관계는 사실상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3년 이후 4차례의 핵 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핵위기가 고조되었으며, 이에 대응한 개성공단 중단 등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로 남북관계는 단절되어 있다.

현 상황에서 남북경협을 활용한 남북관계 개선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정책적 판단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남북경협 사업은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최고 정책결정자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

경협 재개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협의 당위성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며, 아울러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북제재만을 강조하는 ‘경협무용론’이나 남북경협을 조건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맹목적 재개 경협론’ 모두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표 5〉 최근 남북관계 주요 일지

일 자	주요 내용
2013 2.12	- 北, 3차 핵실험
4. 8	- 北,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9.16	- 개성공단 재가동
2014 2.20	-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10. 4	- 北, 황병서·최룡해·김양건 방남(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2015 8.20	- 北, 서부전선 포격도발 사건 발생
8.25	- 南北, 8.25합의(이산가족 상봉, 민간교류 활성화 등)
10.20	- 추석계기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2016 1. 6	- 北, 4차 핵실험
2.10	- 개성공단 전면 중단
3. 8	- 南, 독자 대북제재 발표(금융제재·해운통제·수출입통제 강화)
9. 9	- 北, 5차 핵실험
12.12	- 南, 강화된 독자 대북제재 발표(금융제재 대상 추가 등)
2017 9. 3	- 北, 6차 핵실험

자료: 내외신 언론보도 자료로 필자 재구성.

2. Genuine changes : 근본적 변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남북경협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라는 평화의 가교(Bridge of Peace) 역할을 수행해왔다. 1998년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면서 장전항을 사용하던 북한의 동해 함대가 후방으로 약 100km 후퇴하면서 사실상 군사분계선을 북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개성공단의 경우에도 2003년 공단 조성을 계기로 남한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부대를 후방으로 약 10km 이동시킴으로써 북방한계선을 북상시킨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경협 사업의 본격화로 대립과 갈등의 비무장지대(DMZ)가 화해와 협력의 평화 통일 이상을 실현하는 평화적 공간(Dream Making Zone)으로 변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과 남한의 정책 추진 일관성 결여로 남북경협의 효과는 지속되지 못하였다. 2008년 북한의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남북 간 대립 국면이 촉발된 이후, 북한은 계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 군사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남한도 보수와 진보가 공감할 수 있는 경협정책의 부재로 정책 추진 동력을 상실하였다. 그 결과 남북경협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은 2008년, 개성공단은 2016년에 중단되면서 현재 남북 간 경제협력은 전무한 상황이다.

남북경협의 재개로 남북관계 변화의 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협을 관계 정상화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 추진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경협의 근본적인 목적은 단기적

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보탬이 되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경제강국 구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남북경협이 정치·군사적 영향으로 중단되거나 정체되지 않도록 점진적·단계적인 경제협력 재개 방안 마련을 통해 남북 간 통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경협을 통한 북한 시장화 촉진으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변화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bottom-up 방식’의 남북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제도화를 추진하여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3. Agreement : 남북간 합의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발전적 협력 방안에 대한 남북간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경협 재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경협 중단 사태의 재발 방지, 투자 보장 등 발전적 협력 방안에 대한 남북간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남북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2013.8.14)」를 통해 가동 중단 사태의 재발 방지,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해결, 국제화 추진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참고하여 남북간 경협 재개를 위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남북간 합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동해권, 서해안 등 권역별 남북 협력 벨트를 마련하여, 동서를 잇는 소위 ‘H라인의 경제 벨트’를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경제통일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북한도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2010~2020)」⁸⁾을 통해 서남 방면(신의주-남포-평양)과 동북 방면(나선-청진-김책)의 양대 축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남북한 모두 한반도 개발을 위해 ‘H라인의 경제 벨트’를 조성해 장기적으로 협력을 확대해나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합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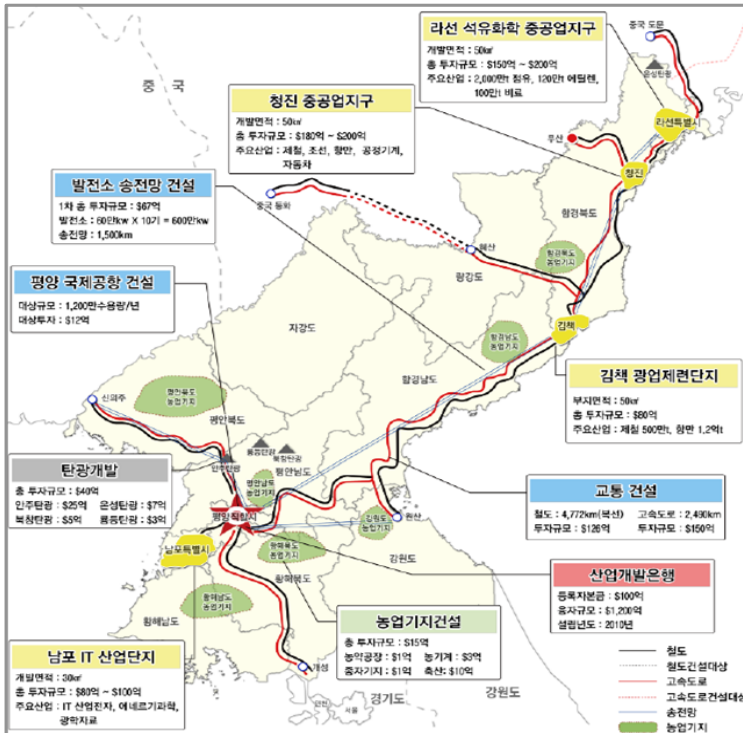
〈그림 5〉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자료 참고.

8) 북한은 2011년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2010~2020)」을 발표하여, 10년 간 총 1,000억 달러의 인프라 등 투자 유치 계획을 수립. 농업, 산업단지 개발, 에너지 및 인프라 개발 등 크게 12대 분야로 나누어 추진. 남포IT산업단지 등 공업지구 개발에 490~580억 달러 투자 예정. 철도·고속도로·공항 등에 258억 달러 투자 예정. 탄광 건설, 화력발전소 건설, 송전망 건설 등에 100억 달러 투자 예정.

〈그림 6〉 북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자료 참고.

4.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s : 국제사회의 제재

북한의 핵 개발 지속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확대·강화 추세에 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수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안보리 제재안과는 별도로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17.8.2 발효)’ 등 독자제재를 마련해 대북 압박을 확대하고 있다.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특수성을 근거로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가 진전될 경우,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의 긴장 해소 및 정세 안정을 견인하여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주장하여 안보리 제재위원회로부터 의무면제(waiver)를 받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표 6〉 UN의 對 북한 제재 일지

구 분	제 재	주요 내용
1차 핵실험 (’06.10. 9)	1718호	- 무기, 사치품 등 금수조치(embargo)
2차 핵실험 (’09. 9.25)	1874호	- 금융 제재 강화 - 선박 검색 강화
3차 핵실험 (’13. 2.12)	2094호	- 대량 현금(Bulk Cash) 이전 금지 - 선박 검색 의무화
4차 핵실험 (’16. 1. 6)	2270호	- 광물수출 금지 (민생 목적 제외)
5차 핵실험 (’16.11.30)	2321호	- 석탄 수출 상한선(금액·총량) 제한
6차 핵실험 (’17. 9. 3)	2375호	- 대북 원유 공급 동결 - 섬유제품 수출 금지

자료: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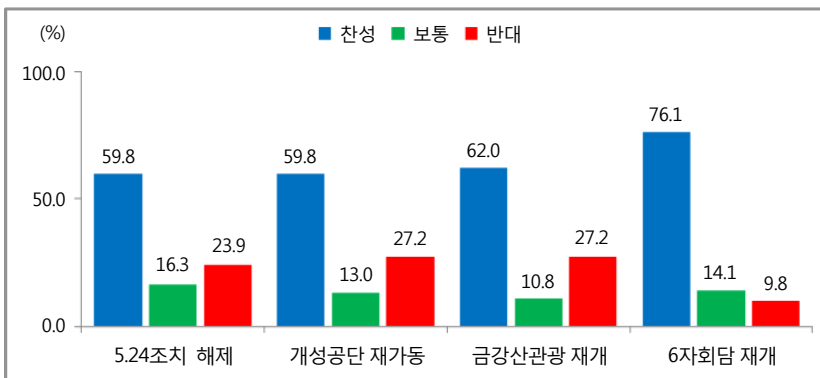
5. National consensus : 국민적 합의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 ‘평화를 견인하는 남북경협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남북경협을 활용한 경제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5.24 조치 해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대해 대체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18.1.26~2.5, 전문가 9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형성된 국민적 합의에 바탕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남 갈등 해소 및 통일 공감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토론과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남북경협이 평화에 기여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금강산관광 등 기존에 추진한 바 있는 경협 사업의 재개를 통한 시장경제 교육 확대는 통일 비용 절감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림 7〉 남북관계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IV. 시사점

어렵게 마련된 남북대화의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비정치적 접근을 우선 활용하는 한편, 점진적·단계적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비정치적 접근 방식의 남북간 협력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는 우선 추진하고, 즉시 추진 가능한 경협 사업은 검토 후 재개를 고려해야 한다. 남북 상호 신뢰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정치·이념적 갈등 가능성이 낮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용이한 인도적 지원 사업부터 우선 추진할 수 있다.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 확대와 함께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마음 얻기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및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시장경제 교육 확대는 통일 비용 절감에도 효과적임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남북경협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이 남북관계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협을 관계 정상화에 활용하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남북경협이 정치·군사적 영향으로 중단되거나 정체되지 않도록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간 통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분리하여 접근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은 ‘평화를 견인하는 남북경협’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통일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접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속에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남북경협이 평화에 기여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정부는 경협 활성화 토대 강화를

위해 평화 정착 및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민간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win-win)의 사업을 발굴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북한 건설·개발제도 및 계획현황 연구』, 세종: 국토교통부, 2015.
- 이해정·이용화 외, 『통일경제의 현재와 미래』,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2016.
- 김현일, “新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공약과 의의”, 『북한포커스』 Weekly KDB Report, 2017.
- 이용화·이해정, “최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비정치적 접근 필요”, 『VIP REPORT』 17-22호, 2017.
- 이해정, “독일 사례를 통해 본 통일 기반 여건 조성 방안 - 비정치 분야의 다양한 접촉면 확대 필요”, 『현안과 과제』 제13-48호, 2013.
- _____, “새 정부 출범 100일, 남북관계 진단과 과제 -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 모색“,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66회 평화나눔 정책포럼, 2017.

이해정·이용화, “남북경협을 통한 통일경제 토대 조성-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시리즈 ⑩ 남북경협)”, 『VIP 리포트』 제17-12호, 2017.

_____,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 『VIP 리포트』 제17-28호, 2017.

_____, “남북경제협력의 정상화 과제 - AGAIN, 남북경협”, 『현안과 과제』 17-27호, 2017.

_____, “新남북경협의 과제와 시사점 - 남북경협 30년 평가”, 『현안과 과제』 18-01호, 2018.

임을출, “새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전략은?”,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제12차 통일한국포럼 발제문, 2017.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